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참여단체 조정 및 규정 정비 통해 신뢰성·투명성 확보해야

그동안 제평위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껏 포털의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업계 일부에서는 제평위가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평위 내부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B위원은 “퇴출 또는 제재 관련해서 제평위원이 로비에 노출된 사례를 접해 씁쓸하다. 이에 대한 공론을 통한 방지책이 요구된다”며 “제평위가 포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방파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계 D위원도 “양대 포털사가 제평위를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과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그동안 제평위가 이뤄낸 성과가 작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언론계 A위원은 “포털은 책임질 것을 제평위에 일부 미루고, 제평위는 포털의 보호막 역할도 일부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평위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도 상당하다. 어뷰징 감소, 베껴쓰기 막기, 선정적 기사,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여러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언론계 F위원도 “현재의 제평위는 연합뉴스 퇴출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평위는 지금까지의 어떤 수단보다 언론사의 어뷰징 등 非저널리즘적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구였다”고 평가했다.

언론계 E위원은 “제평위 출범 이전에는 소위 포털마다 비공개로 위촉된 전문가 7인이 모든 매체의 입점과 퇴출을 진행했다. 물론 공개된 텍스트 형태의 관련 규정 자체도 없었다”며 “기존 미디어들이 제평

위 출범 이전 뉴스캐스트 시절 자행했던 트래픽과 광고비에 혈안이 되었을 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평위의 성과와 필요성을 강조한 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존폐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언론계 A위원은 “누군가는 언론이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포털을 벗어나, 각 언론사가 자체 페이지에서 뉴스를 하는 것으로 경쟁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포털 안에서 언론사끼리 경쟁하는 현재 구도에서는 규정은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계 C위원은 “포털 뉴스는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출하는 언론사 아닌 업체들”이라며 “제평위의 목적은 이런 업체들을 포털 안에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평위의 존재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학계 A위원은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계속 생겨날 것인데,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조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언론산업, 뉴스콘텐츠 이용 특성 등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위원회가 언제까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 제평위와 포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갈 뻔아야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제평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포털 뉴스서비스와 제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위원들은 제평위 참여 단체 조정, 제평 위원 자격 강화,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체제를 보완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계 A위원은 “포털에서 뉴스를 계속할 것이라면 제평위가 해야 할 것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현 체제를 깨졌다면, 다른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 무엇을 막아낼 것인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논의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계 D위원은 “모든 언론이 포털에 종속되고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양태지만 인터넷 뉴스 시장이 초기 정착기부터 우리나라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젠 되돌릴 수도 없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포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논리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자유시장경제에서 포털에게 뉴스서비스를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66

누군가는 언론이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포털을 벗어나, 각 언론사가 자체 페이지에서 뉴스를 하는 것으로 경쟁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포털 안에서 언론사끼리 경쟁하는 현재 구도에서는 규정은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다. 99

그는 이어 “지금의 체제를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지금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뷰징 문제와 질 낮은 옐로우 저널리즘 양산은 제평위와 포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갈을 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B위원은 “입점 매체가 너무 제목장사, 선정성,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포털의 제재 또는 숨아내기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품질의 기사에 대한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재배열이 필요함에도, 포털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포털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뉴스의 배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100

유재형 yoojh1999@kaa.or.kr